

“오늘 하계올림픽 추진위 발대식”

전북자치도, 23~27일 주요 일정 발표... 김관영 도지사 완주 방문·국회 예산 정책 간담회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23~27일 예정된 주요 일정들을 공개하며, 도민 소통과 헌안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에는 도청 핵심 현안과 관련된 굵직한 일정이 다수 예정돼 있다”며 “언론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민과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3일 오후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주하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린다.

이날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올림픽 데이’로, 총 2,036명의 위원이 위촉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염원을 담고, 위촉장 수여와 선언문 낭독,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반기 특례 실행 추진 상황 보고회’가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개최된다. 이어 11시 30분에는 도청 회의실에서 디지털 기반 도시 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3~27일 예정된 주요 일정들을 발표하고 있다.

구원(KIST) 간 체결된다. 이날 오후에는 5개 도내 기업과 총 6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식도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RE100 참여 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예정돼 있으며, 건설교통국과 환경산업국의 정례 브리핑도 진행된

다. 건설교통국은 대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환경산업국은 석면 관련 시설 철거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도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생생마을 콘테스트 본선도 열린다.

또한 미래첨단산업국의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국정과제 반영 관련 브리핑과 올림픽 추진단의 정례 브리핑이 열린다.

26일 오전 7시 30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정책 조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오전 9시에는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한 현상상황실 현판식도 진행된다.

27일 오전 11시에는 고창 웰파크 호텔에서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 오후 2시에는 발효식품 산업 육성지원센터 준공식이 각각 열린다. 같은 날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연구원이 함께하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정책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개최돼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협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부안 모항에서 '2025년도 공간정보 및 지적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적행정의 미래는 융합”

도, 공간정보·지적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연구과제 2편, 내달 전국 세미나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부안 모항에서 도내 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학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공간정보 및 지적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공간정보 기술 환경 속에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고, 지적 중심의 행정체제를 넘어 AI·메타버스·데이터 기반의 융합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도내 공무원, 관련대학,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했으며, 총 30편 중 8편을 서면심사로 선정해 이날 본선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8편은 △지번 연계 정보 등록·관리 체계 제도화 방안 △국·공유재산 지목 불일치 해소 방안 △인·허가 준공에 의한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를 통한 토지 지목현실화 방안 △AI 기반 토지 합병조건 확인시스템 구축 △LX플랫폼 활용 국가기반시설 현

황 분석 △메타버스 기반 가상 국토관리 및 지적재조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제공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온라인 감성분석 모델 개발 등이다.

발표대회 심사위원들은 연구의 타당성,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편을 도지사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2편은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특히, 최우수로 선정된 '지번 연계 정보 등록·관리 체계 제도화 방안'(공무원: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과 '메타버스 기반 가상 국토관리 및 지적재조사'(민간: LX 전북본부 지적재조사기획단)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48회 전국 지적 세미나'에 전북 대표 과제로 출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발표된 우수과제를 향후 실무부서 심층 검토를 거쳐 도청 연계 시범사업 및 정책과제로 반영하고, 산학관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2024

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8)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중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실태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필요 시 입법활동을 통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스마트기기가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교육의 편리성 추구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가 발생한 고창 국지도 15호선 현장을 직접 찾아 응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명 피해 제로’... 도, 장마철 재난대응 강화

합동 대책회의 열고 인명피해 예방 등 집중 논의
도내 수해 현장 직접 점검... 현장관리 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장마에 따라 지난 20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군 간 재난 비상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 비상 보고체계, 재해취약지역 사전 점검·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 보고체계 강화,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및 통제, 선제적 대피조치 실행계획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도는 시군과의 공

조를 통해 장마 초기부터 인명·시설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노홍석 부지사는 지난 13~14일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가 발생한 고창 국지도 15호선 현장을 직접 찾아 응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구간은 150mm 이상의 폭우로 인해 아스콘 포장층 균열부 틈으로 유입된 빗물이 교량 접속도로로 옹벽 내부 수압을 높이면서 약 40m 구간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전광판 및 내비게이션을 통한 우회 안내를

병행하며 톨마대 설치, 노면 방수작업 등을 포함한 응급복구를 실시해 16일 완료했다.

현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을 긴급 착수해, 7월 중 복구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현장에서 “장마철 이전 응급복구가 완료된 구간도 안심할 수 없다”며,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재해취약구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재난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여름철 태풍·장마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전북 지역 공무원노조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전북 지역 공무원 노조원들, 정부에 임금 인상 촉구

전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정부에 공무원·교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전북 지역 공무원노조 조합원 30여명은 2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내란 사태가 6개월 만에 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마무리됐다”며 “이제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특히 2025년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열리는 6월을 맞아 “코로나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무원 임금은 민간 대비 83.1% 수준으로 격차가 역대 최대”라며 “공무원 임금 6.6% 인상과 함께 향후 5년간 민간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액 급식비 월 1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3만5,000원 인상 △초과 근무 수당 단가 상향 조정 △명절 휴가비·정근수당 현실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투위 관계자는 “현재 정액 급식비 수준으로는 점심 한끼 6,360원도 안 되는 현실”이라며 “최소한 밥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감액을 56%에서 60%로 조정할 것과, 주말·야간 근무 시 더 낮아지는 수당 단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위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실질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떠나는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작은 정부’ 기조를 폐기하고 공공행정과 공무원 부문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에 정당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타인 명의로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운동위원회는 도내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지난 1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후보자 B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2024년 5월 △국회의원 C 후원회에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2,000만원을, △국회의원 D 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액을 초과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공공의대 설립, 미룰 수 없는 과제”

남원시의회, 법안 통과 촉구 위해 국회 방문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영태 의장과 시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을 만나, 지난 10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남원시의회가 채택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필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공공의대 설립 및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과 남원시의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공공의대의 남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강조한 바 있어, 지금이 바로 의료취약지 해소와 국민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태 의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과 재난의료 체계 구축, 나아가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